

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기획재정부, 2021. 6

□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「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*를 발간하였다.

* '97년부터 매년 2회(1월, 7월)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·제도 등을 정리·발간하여 지자체, 공공기관, 도서관 등에 비치

○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(부·처·청·위원회)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·기관·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,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.

□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○ (금융·재정·조세)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(0.05%p↓),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*, 법정 최고금리 인하(24→20%), 서민·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** 등

*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, 거짓영수증 방지

** (소득요건) 8→9천만원 이하, (가격요건) 투기과열지구 6→9억원 이하, 조정대상지역 5→8억원 이하, (LTV 우대혜택) 요건충족시 10→20%p

○ (교육·보육·가족)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* 등 현장실습 개선, '학교 밖 청소년'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

*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(최저임금의 75% 이상),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(예외적 무급운영 허용)

○ (보건·복지·고용)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*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**,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(50인→5인 이상),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*** 등

*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+ 복지포털('복지로') 개편

**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,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

***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,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

○ (환경·기상)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*,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,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**



- * 전국 공동주택 지역('20.12월) →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('21.12월)
- ** 녹색기업, 환경영향이 큰 기업, 공공기관 등(기존) →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
- (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) 직접 PPA(전력구매계약) 도입*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,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, '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'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**
- * (현행) 발전사업자·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→ (변경)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
- **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
- (국토·교통)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,*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
- *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(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) 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
- (농림·수산·식품) 미주향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,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 신설,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**,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(발급: '22년~) 등
- * '20.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→ '21.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
- **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('21년 1만톤 이상 → '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),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
- ※ 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: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,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
- (국방·병무) 장병내일준비적금* 1% 우대금리 지급,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**, 병역진로 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,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
- *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('21.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)
- ** (기존)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→ (변경)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(귀가제도는 폐지)
- (행정·안전·질서)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, 온라인 그루밍 처벌* 및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·위장 수사,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** 등
- *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(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)
- ※ 온라인 그루밍: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·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
- **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(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)
-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, 공공 도서관,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·비치되며,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.
- 6월 28일(월) 10: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정책 > 정책자료 > 발간물)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,
- 7월 10일경부터는 '이렇게 달라집니다' 웹사이트(<http://whatsnew.moef.go.kr>)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.

기획재정부

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

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.

- ※ 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】 매 분기 → 매월
- 【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】 매 반기 → 매월

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.

▶ 추진배경

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('20.12.23.)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

▶ 주요내용
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
- 가산세 부담 경감
 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
(미제출 : 1% → 0.25%, 지연제출 : 0.5% → 0.125%)
 -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('21.7월~'22.6월) 가산세 면제
 -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%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

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

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.

■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단위 : 원)

- ※ (종합공사) 2억→4억 (전문공사) 1억→2억 (기타공사) 0.8억→1.6억
- (소기업 · 소상공인 물품 · 용역) 0.5억→1억
- (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 · 용역) 0.5억→1억
- (여성 · 장애인 · 사회적 기업) 0.5억→1억

■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
- ▶ 추진배경 :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
- ▶ 주요내용 :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* 수준으로 상시화
 - * 현재 "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('20.5)"를 통해 특례 적용 중
 - (종합공사) 2억→4억 (전문공사) 1억→2억 (기타공사) 0.8억→1.6억
 - (소기업·소상공인 물품·용역) 0.5억→1억
 - (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·용역) 0.5억→1억
 - (여성·장애인·사회적 기업) 0.5억→1억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초

입찰·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

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·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"한국해양진흥공사"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
 - ※ 민간보증기관(계약보증요율 : 0.54%, 입찰보증요율 : 0.03%) 대비 약20~30% 낮은 보증수수료

■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
- ▶ 주요내용 : 입찰·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「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"한국해양진흥공사" 추가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초

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

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·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,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.

-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,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, ③계약해제·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
 -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(종합공사 30 → 10억원, 전문공사 3

→ 1억원, 물품·용역 1.5 → 0.5억원 등)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.

- ▶ 조정대상:(현행:7개) 입찰자격, 낙찰자결정,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등 (추가:3개)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, 개산계약 정산, 계약해제·해지
- ▶ 금액기준:(종합공사) 30억→ 10억, (전문공사) 3억→ 1억, (물품·용역) 1.5억→ 0.5억

■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행정안전부

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

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.05%p 인하됩니다.
(‘21.7월·9월 부과)

- ▶ 추진배경 : 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」 발표(국토부, '20.11월)와 함께 서민·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
- ▶ 주요내용 :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.05% 인하

과표	표준 세율(공시 6억 초과·다주택자· 법인)	특례 세율(공시 6억 이하)	감면액	감면율
0.6억 이하(공시 1억)	0.1%	0.05%	~3만원	50.0%
0.6~1.5억 이하(공시 1억~2.5억)	6.0만원+0.6억 초과분의 0.15%	3.0만원+0.6억 초과분의 0.1%	3~7.5만원	38.5~50.0%
1.5~3억 이하(공시 2.5억~5억)	19.5만원+1.5억 초과분의 0.25%	12.0만원+1.5억 초과분의 0.2%	7.5~15만원	26.3~38.5%
3~3.6억 이하(공시 5억~6억)	57.0만원+3.0억 초과분의 0.4%	42.0만원+3.0억 초과분의 0.35%	15~18만원	22.2~26.3%
3.6억 초과(공시 6억)		-	-	

- ▶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(재산세 부과는 7·9월)



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

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**舊재산분**과 **舊균등분**(개인사업자, 법인)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.

■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(개인사업자·법인)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.

■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(개인사업자·법인)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.

-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,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
- ▶ 주요내용
 - 기존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체계를 →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
 - 사업소분 납기를 7월→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·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
- ▶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(주민세 신고·납부는 8월)

국세청

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

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(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 제2항, 「소득세법」 제81조의7 제1항 개정, 2021.7.1. 시행)

■ 시스템 개통 :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(21.4.1.~6.30.)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.

■ 제도 효과 :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

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,

-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,
-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되며,
-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·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,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
- ▶ 주요내용 :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,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
- 1억원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*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* 4,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

-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1)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)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
* 1) 1월 1일부터 6월 30일 2)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

-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[매입세액 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]에서 [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]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.

-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.5%를 가산세로 부과*하며,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.



*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▶ 추진배경 :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, 과세형평 제고

▶ 주요내용

-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
 -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→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
-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
 -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¹⁾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²⁾까지 부가가치세 신고
 - 1) 1월 1일부터 6월 30일 2)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
-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
 - [매입세액 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] → [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]
-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
 -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
- 가산세 규정 통합·정비
 -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.5%의 가산세를 부과*
 - *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 -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

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관세청

해외직구물품 '구매대행업자 등록' 제도 시행

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 ('19. 12. 31.개정 「관세법」 시행).

-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,
-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.
 - ※ 등록방법 :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'등록신청서' 제출
- ▶ 추진배경 :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
- ▶ 주요내용
 -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
 - 「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」에 따라 '통신판매업자'로 신고한 자로서
 -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금융위원회

법정 최고금리 인하(24%→20%)

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됩니다. ('21.3.30. 개정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이자제한법 시행령」 시행)

- 금융회사 대출* 및 사인간 거래시**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4%p 인하됩니다.

* 대부업자·여신금융기관에 적용(대부업법 시행령, 금융위)

**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(이자제한법 시행령, 법무부)

- 금리 인하를 통해 20%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,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더불어,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·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*를 병행 추진 합니다.

* 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(3.31.), ②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(4.1.), ③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(4.26.) 발표

- ▶ 추진배경 :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
- ▶ 주요내용 :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4%p 인



하

▶ 시행일 : 2021년 7월 7일

서민·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

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(무주택자 대상)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,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.
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.(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)
- 가격기준 :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,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.
- 우대혜택 :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%p에서 최대 20%p로 확대됩니다.(4억원 한도 이내)
- ▶ 추진배경 : 무주택 실수요자의 "내집마련"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
- ▶ 주요내용 :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혜택 확대

구 분	현 행		개 선	
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
우대조건	무주택 세대주(공통)		무주택 세대주(유지)	
①소득기준	부부합산 연소득 0.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.9억 이하		부부합산 연소득 0.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.0억 미만	
②주택기준	6억원 이하	5억원 이하	9억원 이하	8억원 이하
우대수준			최대 4억원 한도(공통)	
①LTV	50%	60%	(~6억) 60% (6~9억 구간) 50%	(~5억) 70% (5~8억 구간) 60%
②DTI*	50%	60%	60%	60%
③DSR	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		은행권 40% / 비은행권 60%	

*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(적용 차주는 DSR 적용)

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의 단계적 확대

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.

- 이에 전체 규제지역(투기·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)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
-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.
- ▶ 추진배경 :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'21.7월부터 단계적 확대 ▶ '23.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
- ▶ 주요내용
 -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

	현 행	1단계('21.7월)	2단계('22.7월)	3단계('23.7월)
주택담보대출	투기·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	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	총 대출액 2억원 초과(①/② 유지)	총 대출액 1억원 초과(①/② 폐지)
신용대출	연소득 8천초과 & 1억원 초과	②1억원 초과		

-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청년·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

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이를 통해 청년·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(예) 3억원 대출(대출이자 2.85%) 시 월 상환금액은(30년만기) 124만원 → (40년만기) 105.6만원으로 14.8% 감소



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· 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.

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.

■ 총 4.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· 지속 확대 공급하고,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.

* 보증료도 기존 0.05%에서 0.02%로 추가인하

■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(0.5%p) 감소
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→2만원으로 감소

■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주공공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
■ 주공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(수도권)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.

■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됩니다.

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.6억원까지 확대됩니다.

■ 소득 7천만원 이하 ·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'보금자리론'의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.

■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
 - ▶ 주요내용 :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·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
 - * 보금자리론(주택가격 6억원 이하) 및 적격대출(주택가격 9억원 이하)에 도입
 -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
 - ③ 주공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
 -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.6억원까지 확대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

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

2021년 6월 30일,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한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됩니다.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입니다.
-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·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합니다.

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그 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됩니다.

-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·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▶ 추진배경 :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
- ▶ 주요내용 :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,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·위험관리,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,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·공시 등
- ▶ 시행일 : 2021년 6월 30일

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

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가



시행됩니다.

■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*할 수 있습니다.

* 제도 시행일(7.6일)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

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,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(사후지급 방식)합니다.

■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(kmrs.kdic.or.kr, 7.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)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 (☎ 1588-0037)

- ▶ 추진배경 :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
- ▶ 주요내용 :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6일

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

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*의 범위가 (i) 법인카드 발급·이용에 따른 '총수익 \geq 총비용※' 이면서, (ii) 법인카드 이용액의 0.5% 이내로 제한됩니다.

* 경제적 이익 : 부가서비스, 기금출연,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

■ 다만, 소기업*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, 국가·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, (i) "총수익 \geq 총비용" 기준만을 적용합니다.

* 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(제조업 등) ~ 10억원 이하(음식점업 등)인 경우 (업종별 상이)

※ 총수익 : 연회비 +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(평균 1.8% 내외)
 총비용 :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+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(결제승인·중계비용 등) +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

- ▶ 추진배경 :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,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
- ▶ 주요내용
 - 원칙 :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
 - (i) 법인카드 발급·이용에 따른 '총수익 \geq 총비용' 이면서,
 - (ii) 법인카드 이용액의 0.5% 이내로 제한
 - 예외 :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, 국가·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, (i) "총수익 \geq 총비용" 기준만 적용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

2021년 7월 21일부터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.
- 또한,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,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.

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

-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 (2+2)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,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
- ▶ 주요내용 :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'규제개선 요청제' 도입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21일



고용노동부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

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
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※ 7.1. 적용직종 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대출 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 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 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

1. 적용범위		
적용대상		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
주요 적용제외		-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('22.1월부터 합산 가능) - 만65세 이상(단,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)
2. 보험료 징수		
보험료율		- 실업급여 1.4%(특고 0.7%, 사업주 0.7%)
수급요건	기여요건	-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	이직사유	- 비자발적 이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)
3. 구직급여 지급		
지급수준		-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	- 120일 ~ 270일
소득활동 인정		-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	
기여요건		-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	-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	-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- ▶ 추진배경 :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"전국민 고용보험" 추진
- ▶ 주요내용 :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

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. ('21. 1. 5. 개정 「산
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)

■ 특고 종사자가 질병·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*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
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.

* ① 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,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
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
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
는 경우

■ 7.1.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,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
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

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
하여 한시적('21.7.1부터 1년간)으로 고위험·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
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
음
- ▶ 주요내용
 -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
 -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

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- 5~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
- 현행 : 50인 이상 적용
 - 개정 : 5인 이상 적용

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

- ▶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- ▶ 주요내용
 -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 · 업종별 단계적 시행
 - '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'19.7월부터)
 - '20.1월 : 50~299인
 - '21.7월 : 5~49인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
2021.11.19.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.

-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
※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참조

-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.

-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,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※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▶ 추진배경 :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
- ▶ 주요내용
 -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 -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
 -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
- ▶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

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.

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- ▶ 주요내용 : (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

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·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.

■ 기간제·파견근로자의 경우,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,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,

■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.

※ 출산전후휴가급여 :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%(월 200만원 상한) 지원(우선지원대상기업 : 90일, 대규모기업 : 마지막 30일)

※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: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%(월 200만원 상한) 지원

- ▶ 추진배경 :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
- ▶ 주요내용 :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

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이 시행됩니다.

■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



구분	개정내용
노동조합 가입 자격	-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(비종사자)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
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	-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-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, 교섭대표노조 결정,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
노동조합 임원 자격	-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-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
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	-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-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(일원화)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·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
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	-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-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·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-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
단체협약 유효기간	-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
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	-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

▶ 추진배경 :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

▶ 주요내용

-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·가입 가능
-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,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(일원화)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(2→3년) /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
-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

▶ 시행일 : 2021년 7월 6일

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신설

2021년 11월 19일부터,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,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.

-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"를 설치합니다.
-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"를 신속하게 소집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,
-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,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▶ 정의

- (필수업무) 재난 발생시 국민의생명·신체의 보호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(필수업무종사자)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
▶ 절차



▶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

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.('21.5.18. 개정 「근로기준법」).

■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.

■ '원직복직,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'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,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



■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
- ▶ 주요내용 :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
- ▶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

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.

- 사용자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)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-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
- ▶ 주요내용
 -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(1천만원 이하)를 부과
 -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▶ 시행일 : 2021년 10월 14일

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

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('21.4.13. 개정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시행)

■ 또한,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"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"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채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■ 2021년 10월 14일부터 "채당금"이라는 용어가 "체불 임금등 대지급금"(약칭 : 대지급금)으로 변경됩니다. ('21.4.13. 개정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시행)

▶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채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절차 간소화

▶ 주요내용

- 소액채당금 지급대상 확대 : (현행) 퇴직자 → (개정) 퇴직자 및 재직자
- 소액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
 - (현행)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채당금 지급(약 7개월 소요)
 - (개정)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채당금 지급(약 2개월 소요)

▶ 시행일 : 2021년 10월 14일

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

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·시행 책무를 부여하고,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

▶ 추진배경
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

▶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수립·시행 책무를 규정
-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, 홍보,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
 -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

▶ 시행일 : 2021년 11월 19일


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5인 미만 사업장 시행

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·시행 됩니다.

※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기시행

- 따라서, 변경된 규정량*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·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* PSM 규정량 조정(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) 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 18종, 상향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
↳ 또한 부식성 액체(염산, 황산, 암모니아수 등)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

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지역 중대 산업사고예방센터)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·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
- ▶ 주요내용 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(별표 13)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(강화) 18종, 상향(완화)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- ▶ 시행일 : 2021년 7월 16일(상시근로자 5명 미만)

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

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1조의2 신설

-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-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,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.

-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

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
- ▶ 주요내용
 -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
 -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
- ▶ 시행일 : 2021년 6월 9일

중소벤처기업부

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

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)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▶ 추진배경 :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
- ▶ 주요내용
 - (가입대상 확대) 성과보상공제사업(내일채움공제)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
 - * 가입대상 : (기존) 중소기업 → (변경) 기존 +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
 - (규모 기준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)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비영리법인
- ▶ 시행일 : 2021년 10월 21일



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(V-SGBC) 운영

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(Virtual SGBC)가 운영됩니다.

- '20년 12월,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의 MOU 체결로 '22년 룩셈부르크 SGBC가 설립될 계획입니다.
- '22년 설립에 앞서, '21년 6월부터는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여,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우리기업의 유럽진출을 도와드립니다.
- 현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제공과 유럽시장 수요조사 및 현지법인화 행정절차 등 관련정보도 안내해 드립니다.
- Virtual SGBC는 우리 중소기업의 그린·디지털 전환과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로, 한국의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와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혁신청이 공동운영 합니다.